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권, 이대로는 안된다

강원일보 오피니언

교사들이 피명에 신음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대 새내기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A씨가 지난 18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A씨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아직 명확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학부모의 갑질이 교사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각 가정의 자녀 수가 한두 명으로 줄어들어 따라 '헬리콥터 부모'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자녀를 과보호하고, 자녀의 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에 비교육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교사들이 소신껏 학습지도나 학생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가 이 정도이니 중·고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학부모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33명에 이른다.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자녀 교육에 극성인 부모들이 독하면 교실을 찾아가 담임교사를 옥박지르고 법적 대응을 운운한다.

이러니 교사들 사이에서 담임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담임을 꺼리는 현상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뒤 더 심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가 흐트러진 차림을 지적하면 인권조례를 내세워 반발한다. 어린 학생들의 인생 항로(航路)에서 담임교사는 선장 역할을 한다. 학생들을 다스릴 교사의 권한이 쪼그라들면서 학생들과 한 배를 타야 할 선장들이 먼저 배를 버리는 세상이다.

무너진 교권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학생이 교사를 우습게 여기고,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며 지도와 훈육을 기피하는 교실에서 교육이 온전하게 이뤄질 리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학부모가 예약 없이는 교문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고 교사를 때리는 행위는 중범죄로 처벌한다.

미국에선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들 수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면 즉각 학교 경찰에 인계한다. 교사가 금지와 사명감을 잃지 않아야 교육이 바로 선다. 일탈 학생에 대해 엄하게 훈육할 수 있게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서 나서야 한다. 이제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에 국회는 물론 학교, 학부모, 사회단체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일상화된 ‘극한호우’, 낡은 매뉴얼로는 재난 못 막는다

동아일보 오피니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총 28차례 ‘극한호우’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한 번꼴로 강수량이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인 강한 비가 내렸다는 뜻이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빈도는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8.5% 늘어나고 있다. 극한호우가 일상화되면서 언제 어디서 물폭탄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세종에는 15일 하루에 283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충남 공주, 경북 문경 등지는 13일 이후 강수량이 500mm를 넘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후가 바뀌는 상황에서 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후변화에 맞춰 매뉴얼도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 매뉴얼은 대부분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14명이 희생된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우 충청북도도는 당시 상황이 교통 통제 요건 중 일부는 충족했지만 ‘지하차도 중심부 수위 50cm’라는 매뉴얼상 기준에는 맞지 않아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순식간에 이 정도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면 이미 사람은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물이 빠르게 유입될 경우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또 국가하천에 설치하는 독이나 댐 등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나타날 강수량을 의미하는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강의 임시제방은 이보다 1m가량 높게 시공했는데도 단시간에 수량이 늘어 범람했다고 밝혔다. 그 높이만큼 제대로 제방을 쌓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행복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행 기준으로는 집중호우 시 강이 넘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산사태에 대비한 매뉴얼도 정비해야 한다.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집중호우가 내린 곳은 어디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취약지역 위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강수량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보건복지부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7.18.) · 시행(10.19) -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8일(화)에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법령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우체국카드 출시

-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마스터카드 신규 카드 출시 업무협약 체결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 마스터카드 코리아(대표이사 최동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20일(목) 전용 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다(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차상위, 15,000명). 월 5만원 이내 실비 지원방식으로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선불충전형 카드를 올 4분기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카드사 대비 3.5배인 우체국 지점(2,400여 개)을 활용해 접근성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카드 등 마스터카드사 자체 보유 특허도 무료로 활용하여 편의성도 높였다.
 - (고용부) 참여자 모집, 지원금지급 등 총괄, (우번) 전용카드 출시, 데이터 전산연계(마스터카드) 터치카드, 비접촉 결제기능 등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자체 특허 무료제공
-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이 더욱 편리하게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향후 관계기관 간 다양한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에 많은 비용이 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더 편하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간, 민간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

-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표준업무관리를 위한 제언

최 지 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강화에 따른 업무관리의 중요성 대두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 의정성과를 가능하는 핵심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제2항에 의거하여 시도의회, 기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조직임
 - 법률적 차원의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단순 행정사무를 넘어 지방의정활동과 연계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 사무조직임
- 지방자치 고도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정지원인력이 배치되었음
 - 2022년 1월에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서 지방자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됨
 - 보장된 지방의회의 의정지원 기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담당해야 하는 기능과 표준업무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임

2. 지방의회 문서관리 기능의 큰 편차 발생

- 통상적인 지방행정기능과 의정지원기능의 차이로 인해 문서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조직 전체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막료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장을 중심으로한 독립된 하나의 조직으로서 계선조직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어 복합적인 형태를 지님 (조성수, 2022)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 및 진단 연구에서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정기능 수행실태 조사결과, 각 지역별 수행 소기능 구분의 편차가 크게 발생함
 - 소기능은 국가표준기록기준표(BRM)에 근거하여 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기능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가장 많은 소기능을 관장하는 경상남도(122)는 인천광역시(56개)의 관리기능의 2배 이상임
 - 국가표준기록표를 통해 생산되고 관리되는 문서는 그 양과 성격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양을 측정하는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진단분석센터는 이러한 업무량 산정기법을 고도화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력산정에 적용하고 있음

• [표 1] 광역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분장 소기능 구분 수 •

자치단체	구분 수	구분	소기능 수
서울특별시	8	언론홍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97
경기도	7	총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도민권익담당관, 의정기획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92
경상남도	4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122
전라북도	5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74
인천광역시	4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	56
광주광역시	4	의정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	95

- 따라서 문서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능의 편차는 지방의회의 기능의 관리가 표준화 되지 않고 지역별로 크게 존재하며, 주후 효과적인 의정지원기능의 업무관리를 위한 표준업무개발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기능편차의 발생원인을 확인하고자 중기능 단위에서 수행사항을 살펴본 결과, 총무·서무, 의회기본운영 기능을 제외하고 다른 중기능의 활용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표 2] 광역 지방의회 사무기능의 중기능 활용현황 •

지방의회	의회일반행정					의정지원		주민대표기능지원			의결(입법/예산) 및 감시기능지원		
	기획·조정	법무	인사·조직	총무·사무	정보·보안	의회기본운영	의사진행지원	민원·청원·주민참여	대외협력·교류지원	홍보	사무감사·조사지원	입법·정책입안지원	기타조사·분석·연구
인천광역시				○		○	○						
광주광역시	○			○	○	○		○	○		○		
경기도의회	○		○	○	○	○		○		○	○		
전라북도의회	○		○	○	○	○		○					
경상남도의회	○		○	○	○	○		○			○		

3. 지방의회 업무 종류와 분류의 체계화, 그리고 지방의원의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 요구

- 지방의회 업무 종류와 분류 체계화, 전자결재시스템 적용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추진 기초 마련이 필요함
 - 지역에 따라 전자결재를 득하지 않고 수행되는 기능이 발견되었으므로, 일하는 방식 변화가 필요함
 - 동일 기능에 대해 유사기관의 업무사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기관이 상대적 효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유용한데, 이를 위해선 기관의 공통 업무를 분류하고 그에 대한 업무량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각 지방의회사무기구가 이후 BRM 표준안에 따라 업무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어떤 기능이 현재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음
- 업무표준화에 대한 지방의원의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가 동시에 요구됨
 - 현재 문서대장의 경우 세부분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의 경우 국 단위로 문서를 분류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음. 그 결과 주관적 업무량 조사표상의 자료로만 분석할 수 있었기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자결재시스템 활용방식 변화가 필요함
 - 이는 문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지방의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전자결재 문서에 익숙하지 않거나 업무지시사항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는 폐쇄성이 본청에 비해 높음
 - 따라서 지방의정교육을 통해 지방의원의 전자문서 기반의 공식적 업무처리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요구됨

출처 :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 전시·공연

복합문화공간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첫 문화행사는
장애예술인 작품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가 장식했습니다.

‘장애인의 날(4. 20.)’에는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함께 누리는 마음의 선물>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정책브리핑 -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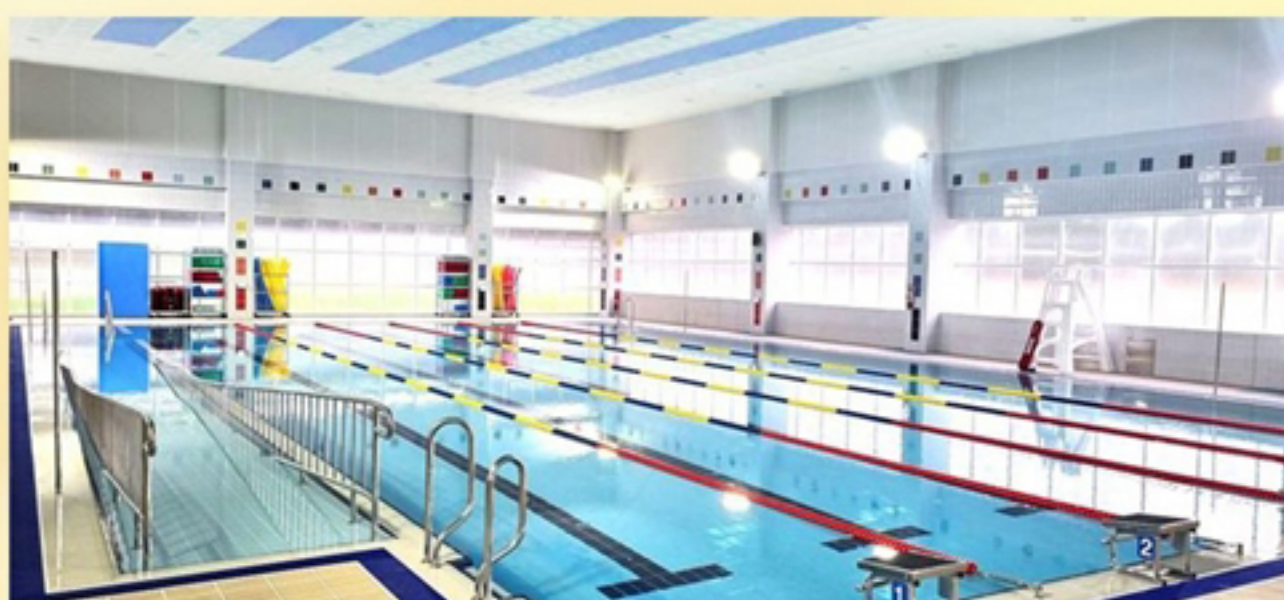
알기쉬운 정책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

지난 3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이음 온라인 누리집



사회통합형 '만다비 체육센터' 개관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만다비 체육센터'가
작년 8월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전국 15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알기쉬운 정책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루어
생활체육을 즐기는 전국 규모의 종합대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2022년 첫 개최에 이어, 지난 6월 두 번째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구, 볼링,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을 함께하며
스포츠로 하나되는 경험을 나눕니다.

사진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블로그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개관(예정)

창작자와 공연자, 관객 모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이 올해 하반기
문을 열 예정입니다.(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 활동을 돕는 공간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사진 출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이음 온라인 누리집

알기쉬운 정책

“

**장애인의 문화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함께 좋아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